“민주당표 차별금지법, 사회화합 저해 법안”

불교계,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에 공분 확산

‘종교 · 전도 제외’ 조항 문제점
조계종 “사회 · 종교화합 저해”
제정연대 “입법 취지 해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불교계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종교 행위를 차별 예외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를 해치고 사회 ·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4조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항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로 밝혀 온 ‘성적지향’ 항목은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조항이 특정종교계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개신교계를 의식해, 사실상 ‘종교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예외조항을 ‘개신교 달래기식’으로 추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높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2월 16일 대변인 삼혜 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종교간 갈등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함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불교계는 그동안 개신교계에 의한 종교차별 및 훼불 행위로 고통 받아 왔다는 점에서, 종교행위에 대한 예외는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불교계는 물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정서와도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차별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 1위는 장애차별(45.5%), 두 번째가 종교차별(37.5%)이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차별유형도 정치적 의견(51.5%) 다음으로 종교차별(31.3%)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국민들이 우리사회에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에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한 것은 국민 정서는 물론,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계종은 “해당 법안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이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종교계와 차별 없는 협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같은날 30개 회원 종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안 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종단협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후 13년 만에 처리를 기대하는 ‘차별금지법’에 ‘특정종교의 신앙에 따른 행위’를 예외조항으로 포함한 것은 특정 종교와의 이해관계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음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또 다른 불평등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단협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끝없는 훼불 사건과 종교 편향의 피해를 인내해 온 불교계 입장에서는, 종교 편향적 일탈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모두가 존중받는 선진사회가 아닌 특정 종교 감싸기로 또 다른 피해를 합법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종단협은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종교 간 갈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한 법안수정 발의를 중단하고, 만인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해당 법안에서 ‘특정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서로 간에 불신하고 반목을 야기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종교화합을 저해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종평위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에 없던 종교에 대한 예외조항이 추가되면서, 발의될 경우 종교 안에서는 ‘차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의 토대가 되거나 분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민들 삶이 더 나아 질 수 있도록, 공당의 의무를 다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조계종 측 관계자는 12월 14일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을 만나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뚜렷한 답은 듣지 못했다. 이상민 의원은 12월 17일경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연기를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 없이 세상 밝히는 ‘성탄 연등’ 성탄절을 앞두고 조계종은 12월 1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성탄절 연등’을 밝혔다. 조계종은 “28일까지 차별 없이 세상을 밝히는 성탄 연등을 밝힌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조계종은 성탄절을 맞아 이웃종교인 등을 초청해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성탄절 연등 점등식을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고 점등식만 진행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종무행정 중심 ‘포교 · 교화’에 두겠다”

진각종 제31대 통리원장 도진정사 취임법회 봉행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도진 정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한불교진각종 제31대 도진 통리원장 취임법회가 12월 15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진 통리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진각 백년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종단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한다. 그것이 승단의 근본부터 살피는 일이며, 우리의 본분사가 되어야 한다”며 “공감하는 신행, 함께하는 종단을 지향하고 승단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모든 종무행정의 포커스를 포교와 교화에 두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교구와 심인당 포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리원에 집중된 인적, 물적 자원을 교구로 분산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진 통리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스승과 신교도가 함께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진각종의 자산이 될 산내수련원 개발을 위한 T/F팀도 구성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에 앞서 봉행위원장 능원 총무부장은 봉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봉행위원장으로서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31대 통리원장 취임법회는 우리는 참회와 서원, 수행과 정진을 체로 세우며 육바라밀 실천으로 현세정화 할 것을 서심 결정하는 발심의 자리이자 상생의 인연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31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도진 정사님과 새로운 집행부의 종책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모든 진언행자들이 감동하면서 공감하는 신행, 함께하는 종단으로 발전하길 서원한다”고 덧붙였다.

익정 총금강회장은 일지정 수석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도진 통리원장님의 취임은 세대교체를 통해 침체된 종단에 새바람이 일어나기를 염원하는 전국의 종도에게 기대감을 줄 뿐 아니라, 백년대계의 기초를 세울 것이라 믿는다”며 “승속동행은 명실상부 시대적인 요청사항일 뿐만 아니라 종단 발전에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총금강회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정신적 자산을 남겨주기 위해 오늘부터 신발 끈을 조여매고 원장님과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경정 총인예하와 인의회 부의장 덕일 정사를 비롯해 종의회의장 효원 정사, 현정원장 회성 정사, 교육원장 효명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덕운 정사,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원혜 정사를 비롯해 집행부 부 · 실장 스승과 대구교구청장 증혜 정사, 부산교구청장 진광 정사, 대전교구청장 의신 정사, 전라교구청장 법경 정사, 경주교구청장 원주 정사, 총금강회 수석부회장 일지정 보살, 위덕대 장익 총장 등이 동참했다.

한편, 이번 취임법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참석인원은 최소화 했으며, 이후 언택트 온라인 서비스(유튜브 및 SNS)로 공개했다. 또한 종단의 새 출발의 첫 행보로서 ‘월곡2동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은 총본산 지역인 월곡2동의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기초수급 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200채를 전달한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11기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진우 스님, 11기 위원 위촉



조계종 제11기 고시위원장에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수진 스님, 일귀 스님, 대전 스님, 승원 스님, 무애 스님, 여연 스님, 상덕 스님, 수경 스님, 운산 스님 등 총 9명을 고시위원으로 위촉했다. 고시위원 스님들의 임기는 2022년 11월 12일까지로, 2년간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급 승가고시를 관장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 수진 스님은 “고시위원 스님들과 함께 승가고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 각급 승가고시가 무사히 회향한 것처럼 2021년 각급 승가고시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에 따라 의연하게 대처하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시위원회는 이날 위촉장 수여 직후 회의를 열고 2021년 각급 승가고시 일정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 ·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5급 상반기 승가고시는 2021년 3월 11일 오전 8시(장소 미정), 하반기는 9월 5일 오전 8시(장소 미정), 4급은 3월 19일 오전 9시 중앙승가대, 3급은 4월 2일 오전 8시 중앙승가대, 2급은 10월 1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1급은 4월 15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코로나19 등)으로 고시 개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기될 수 있다.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을 은사로 1974년 수계하였으며, 해인사승가대학장 · 범어사율학승가대학원장을 비롯해 해인사 율주, 제8기 고시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해인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내년 상반기 4대사업 발표

원효학술상 · 청년불자상 등 각종 공모 사업 진행 계획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진흥단체인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불교진흥원)이 2021년 신축년 상반기에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불교진흥원은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2021년도 상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불교진흥원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제11회 원효학술상 △대원청년불자상 · 동아리상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불교기관 · 단체 지원사업이다.

인문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 현대 사회 · 문화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된 ‘원효학술상’은 내년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 방법은 직접 및 우편으로 이뤄진다. 시상 및 상금으로는 학자 부문 논저(1명)에 3000만원과 특별상에 1500만원, 석 · 박사 과정 학생 부문 논저에 300~800만원이 수여된다.

올해 신설된 ‘대원청년 불자상(리더/일반) · 리더상’은 청년불자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과 초 · 중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불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 대학원생 리더에게는 각각 300만원, 일반에게는 1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는 50만원,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 100만원,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 1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도 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제2기 ‘대원청년 불자상(리더/일반) · 리더상’은 내년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받는다. 접수는 이메일(kbpf2606@daum.net)로 하면 된다.

내년 3회째를 맞는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는 시대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kbpf2606@daum.net)이다.

선정된 연구자와 단체에는 불교 학술 부문 · 저서 부문에 500만원~1500만원, 번역서에 300만원~1200만원이, 불교 콘텐츠 부문(만화 · 동화 · 소설 · 찬불가 작사 · 작곡 · 수행 프로그램 개발)에 300만원~1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올해에 신설된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은 내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내년도 공모가 진행된다. 접수는 이메일(kbpf2606@daum.net)로 받으며, 상세 내용은 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된 기관과 단체에게는 사업 내용에 따라 100~5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된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에도 불교계 세밑 자비나눔

조계종 중앙신도회 · 해인사 등 눈길



중앙신도회 이금석, 추성호 부회장과 최상원 직할교구 신도회장이 남대문쪽방상담소를 찾아 코로나극복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의 자비보시행이 이어지고 있다. 동지를 앞두고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12월 17일 종로구 · 중구 소재 소방서와 경찰서에 동지팥죽을 전달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돈의동 · 창신동 · 남대문 쪽방촌 일대 이웃들에게 포장팥죽 2000개와 마스크, 핸드워시, 찜질팩 등 방역 · 보온 물품을 전했다.

지역에서도 따뜻한 행보가 이어졌다.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 금선암 주지) 주최로 12월 15일 자연음식문화원(원장 유정희)과 야외 주차장에서 열린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에는 금선암(주지 덕산), 태고종전북종무원(원장 진성),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 전주시청 연우회(회장 김상용) 등이 참여해 1000kg의 김장김치를 만들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마련된 김장김치는 송광 · 정심원(원장 이경주), 금선백련마을(원장 김찬우), 전주서원노인복지센터(관장 동찬) 등 불교계 복지기관과 지역 소외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도 12월 16일 가야면 코끼리행복문화센터서 연말 자비행복나눔을 펼쳐 총 2000만원을 기탁했다.

노덕현 · 조동제 전북지사장